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을 위한 민·관·학 협의체 출범

- 농업계·정부·학계가 함께 논의하여 농업인 소득·경영 안정 방안 마련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6월 19일(수) 오후, 정부 세종청사에서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방안을 논의·마련하기 위한 민·관·학 협의체(이하 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하였다.

협의체는 농업계, 학계, 정부가 농업인 소득·경영 안정, 쌀·원예농산물 선제적 수급관리 등 방안을 함께 논의하여, 농업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출범하였다. 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송미령 장관과 서울대 김한호 교수가 맡고, 이승호 한국농축산연합회 회장, 최홍식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상임대표 등 농업인단체장들과 농업정책보험·직불 및 농산물 수급관리 분야 전문가 등 22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협의체는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을 위해 필요한 과제를 논의하고, 분야별 실무작업반을 통해 협의체에서 제기된 사항은 보완·구체화하는 등 8월말까지 논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출범식에서 농식품부는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의 구축방향을 설명했다. 소규모 농가 증가 및 농가 고령화, 규모화·법인화가 함께 진행되어 농업경영 형태가 다변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여건에 맞게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을 강화해 나간다. 농가 위험관리에 중점을 두고 농업정책보험을 확대하고 있는 미국과 기본직불을 통해 생산중립적인 방식으로 농가에 소득을 지원하는 유럽연합(EU) 사례를 참고하여, 농업정책보험과 농업직불을 함께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우선, 품목별 적정생산 기반 하에서 평년수입의 최대 85%를 보장하는 수입안정보험을 내년부터 전면 도입하고 쌀·채소·과일 등 주요

농산물으로 대상품목을 확대할 계획이다. 농가소득 안정, 식량안보 및 저탄소·환경보전 등 영농활동 촉진, 농업인력 세대전환 등을 위해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을 5조원으로 확대해 나간다. 또한,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복귀할 수 있도록 재해복구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농작물 재해보험의 대상 품목·지역 및 자연재해성 병충해 보장범위 등을 확대한다.

송 장관은 “협의를 통해 정부의 정책방향을 농업계·학계와 공유하고, 현장·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책을 마련해 나간다는 점에서 협의체 출범의 의의가 있다.”라고 하면서, “협의체에서 충분한 의견수렴과 논의를 거쳐 의미 있는 결과물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협의체 논의결과를 기반으로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방안을 보완·구체화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올해 하반기에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붙임 모두발언

담당 부서	농업정책관 농업경영정책과	책임자	과 장	홍인기 (044-201-1711)
		담당자	서기관	김상현 (044-201-1715)



반갑습니다. 농식품부 장관 송미령입니다.

지난달 발표된 2023년 농가소득은
처음으로 5천만원을 돌파하였고,
농업소득도 2022년 대비 17.5%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영농에 종사한 농업인들의 노력의 결실이며,
농산물 수급관리, 경영비 부담 완화, 직불금 확대 등
정부의 정책도 소득 향상에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자연재해·가격하락 등 경영위험으로 인해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하기에는
여전히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이상기후로 인해 자연재해의 빈도·강도가 강해지고
농산물의 특성 상 수급·가격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농업인의 경영위험 완화를 위한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품목별 적정 생산·공급 기반 하에서
농업정책보험과 농업직불을 함께 확대하는 방향으로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먼저 평년수입의 최대 85%를 보장하는
품목별 수입안정보험을 내년부터 전면 도입하고,
쌀·채소·과일 등 주요 품목으로 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농산물 수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수급관리 정책과 연계하여 보험 가입을 지원하겠습니다.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을 5조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작물에 관계없이 면적에 따라 지급하는 기본직불을
농업인의 기초 소득안전망으로 확립하는 한편,
식량안보 및 저탄소·환경보전 등을 위한
선택직불을 확충하겠습니다.
청년 영농정착지원, 고령은퇴농 소득 지원을 강화하여
농업인력 세대전환도 뒷받침하겠습니다.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복귀할 수 있도록
재해복구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의 대상 품목·지역을 확대하고
자연재해성 병충해에 대한 보장범위도 넓히겠습니다.

선제적 수급관리로 농산물 수급·가격을 안정시키겠습니다.
채소·과일 수급상황에 대한 예측·관측을 정교화하여
품목별 적정 재배면적을 도출하고,
이에 기반하여 지자체·생산자 중심의
수급관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쌀도 수급예측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초과생산이 예상된 경우에는
수확 전에 선제적으로 수급대책을 시행하겠습니다.

정부는 농업제·학제 등과 함께 논의하여
농업인 소득·경영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오늘부터 출범하는 민·관·학 협의체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반영함으로써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에
필요한 예산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